

주원산오리

NEWS

주원산오리, 2021 대한민국 소비자만족지수1위 수상

(주)주원산오리(대표 이우진)가 11월 30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2021 대한민국 소비자만족지수1위’에서 가공식품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소비자만족지수 1위’는 국내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고 미래성장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우수 기업을 발굴, 선정해 공로를 치하하고 격려하고자 제정됐다.

하림의 시스템과 노하우를 오리에도 도입해 2014년부터는 업계 최초로 북미 전역에 판매를 시작했으며, 2020년에는 ‘건강한오리’ ‘덕हत도그’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한 간편 조리 제품을 선보여 다변화를 꾀했다.

주원산오리는 ‘아스타잔틴(Astaxanthin)’을 생성하는 미생물이 첨가된 사료를 먹고 자란다. 또한 사양관리 매뉴얼을 통해 사육을 시스템화하고, 모든 농가 항생제 잔류 물질 실시간 검사와 자체 방역차량 운행 및 농가 방역 지원, 우수 농가 벤치마킹 시스템 운영 등으로 차별화를 꾀했다.

주원산오리 측은 프리미엄 원료육 시장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소비자가 오리를 직접 손질하기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 부위별로 절단한 다양한 ‘건강한오리’ 제품을 출시해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건강한오리’는 무항생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에서 아스타잔틴이 포함된 오리 전용사료로 키운 오리만을 원료로 사용한 프리미엄 제품이다.

업체 관계자는 “쿠팡, 마켓컬리 등 성장에 따라 신선 부분육에 대한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집에서 더 쉽게 요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을 출시해 제품 라인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 머니투데이

보온·소독 등

시설 보강에 총 71억원 지원

전라남도는 방역시설이 미흡한 농가에 오리 입식을 제한한다고 20일 밝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기본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가금농가 보호를 통한 안정적 오리산업 경영을 위한 조치다.

전남도는 오리 입식 전 신고제에 따른 사전 점검을 엄격히 적용해 조금이라도 미흡하면 개선될 때까지 입식을 제한한다.

또 현재 사육하는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역학조사를 세밀하게 실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는 것은 물론 추가 입식도 제한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발생농장 7건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방역시설이 미흡하고 기본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기 때문이다. 또 12월 전남지역에서 겨울 철새가 지난해 22만7000마리보다 25% 늘어난 28만4000마리가 관찰되는 등 추가 발생 위험성이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전라남도는 오리 사육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가금농장의 방역시설 중 가장 시급한 농장 입구와 마당 소독시설 보강사업에 올해 45억원을 투입한데 이어 2022년에도 15억원을 지원한다. 가금농장의 CCTV 등 방역시설 및 장비 개선에도 4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겨울철 하우스형 축사의 내부 온도를 떨어뜨리는 틈새 바람을 차단하기 위한 환경개선사업에 처음으로 15억원을 지원한다.

전도현 도 동물방역과장은 “기온이 내려가면 바이러스 생존 기간이 길어지는 반면 방역 활동과 소독 효과는 떨어져 발생 위험성이 높아진다”며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과 축사 진입 시 전용 의복 착용 및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방역수칙을 빈틈없이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 뉴스1

전라남도

MGMS

축단협

NEWS

대체가공식품 축산매대 판매 행위 중단 ‘촉구’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는 이마트가 지난 2일부터 수도권 20개 점 내 축산매장에서 100% 식물성 단백질을 활용한 축산대체식품 판매를 개시한 것과 관련해 축산대체식품을 축산매대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중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대체육을 가공식품이 아닌 소고기, 돼지고기와 같은 동일한 축산 품종으로 고려해 고객들에게 새로운 선택권을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축산코너에서 100% 식물성 단백질 식품을 진열 판매한다고 알려졌다.

이에 대해 축단협은 지난 7일 성명서를 내고 “고기와 같은 동물성 단백질이 전혀 함유돼 있지 않은 식물성 식품을 소비자 선택권이라는 미명하에 축산매대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엄연한 소비자 인식 왜곡”이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또한 축단협은 대체가공식품은 항생제와 맛을 위한 식품첨가물 투입으로 식품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이마트 측에 축산 매대에서의 판매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엄연히 축산물인 아닌 식품을 축산코너에서 판매하는 것은 축산물에 대한 불필요한 소비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국내 축산업 기반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한 이치”라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연구(R&D) 예산투입 등 축산대체식품 육성에 앞장설 것이 아니라 식품안전과 영양학적 수준이 보장된 전통 축산물 진흥정책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축단협은 농식품부에 공문을 보내 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축산업 기반 유지를 위해 선진국과 같이 ‘고기’ 또는 ‘육(肉)자’, ‘유(乳)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용어 정의와 안전성 검증절차 등 법적 제도화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http://www.aflnews.co.kr>)

축산업 ‘허가요건 강화’ 축산법 시행령 개정 기존 허가농가도 소급 적용, 오리농가 76% 해당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업 허가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축산 농가들은 이번 개정이 축산 농가들의 막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우선 농식품부의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 중 별표1 축산업 허가 및 등록요건을 살펴보면 종돈 사육시설(종돈업)과 가축사육시설(대지사육업)을 설치하되 환기시설을 통해 강제 환기가 가능한 밀폐형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해당 사항은 신규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외에 기존에 허가 받은 축사 내에 신규로 설치하는 사육시설도 포함된다.

농식품부는 또 개정안을 통해 종돈업과 종계업 또는 종오리업, 돼지사육업, 닭(산란계·육계)·오리 사육업의 경우 사육시설에 대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할 것을 명시했다. 이번 개정안에 명시된 대로 신규 허가자는 물론 기존 허가 농가도 5년 내에 앞서 언급한 시설·장비를 갖춰야 한다.

농식품부의 이번 개정안에 대해 축산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이번 개정이 현실화될 경우 입게 될 축산 농가들의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은 최근 성명서에서 “이번 개정안은 축산업 허가요건을 강화하면서 돼지·가금 사육농가들의 사육시설에 대해 무조건 건축허가(또는 신고)를 받은 일반 건축물만 인정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또 신규 농가는 물론 기존 허가자도 소급적용을 의무화하고 있다”라며 “건축법에서 사육시설로 사용가능하다고 인정한 가설건축물에 대해 농식품부는 무슨 권한으로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축단협은 농식품부에 제출한 의견을 통해 “기존 시설이 개방형이면 연결하는 축사면적만 다른 구조(밀폐형)로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별도의 동으로 설치하는 경우만 가능하다”며 “기존 축사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자에게 이번 개정안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금지의원칙에 저촉된다”고 지적하고 기존에 허가 받은 축사는 개정안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www.agrinet.co.kr>)

농림축산
식품부

NEWS

축단협

NEWS

“농특위 적정사육두수 관리방안 철회를” 축단협 “사실상 가축 감산정책” 비판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 이하 축단협)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회의 적정사육두수 관리방안 도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농특위가 지난 3일 개최한 제11차 본회의에서 ‘지역자원기반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축산농가 경영안정화 방안’ 논의과정에서 ‘적정사육두수 관리
방안 마련’ 아젠다가 등장했다.

이번 자료에는 ‘축종별 적정사육두수 연구용역 및 시범사업, 돼지사육업 신
규 입지제한 강화, 돼지 악취방지 설치기준 마련, 가금사육업 가설건축물 축
사 제한 등 허가기준 강화’와 같은 구체적인 축산규제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이에 대해 축단협은 지난 9일 성명서를 통해 농특위가 축산농가의 생존권대
책은 마련하지 않은 해 사실상 가축 감산정책인 적정사육두수 관리방안을
마련해 축산농가들을 핍박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제8차 농특위 본회의의 결과 ‘제기 의견은 조치계획 검토 및 향후 세부이
행계획 수립 시 관계부처 등과 협의·검토’기로 정리했음에도 이후 농특위 축
산소분과는 축산단체들과 한 차례의 간담회 없이 협의되지 않은 적정사육
두수 관리방안을 상정하여 서면결의를 받는 등 축산농가의 민의는 반영하지
않은 채 생존권을 짓밟는 정책만 내놓고 있다는 것.

또한 2050 탄소중립위원회 시나리오에도 탄소발생저감을 위한 에너지·사
료효율 개선을 중심으로 농축산분야 탄소중립정책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
서, 탄소중립 핵심인 경축순환과 무관한 적정사육두수관리를 농특위 아젠다
로 반영하는 것은 정책모순이라고 반박했다.

축단협은 “축산말살방안인 적정사육두수 관리방안을 삭제할 것을 촉구하며,
이와 함께 축산농가 민의를 수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축산소분과 논의
정상화를 기하기 바란다”며 “만약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우리 축산단체
들은 농특위와 생존권을 걸고 전면전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출처 : 축산신문

가금농장 67곳 방역 미흡 95건 적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12일부터 이달 9일까지 가금농장 604곳을 현장 점검한 결과, 67개 가금농장에서 방역 미흡사항 95건을 적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미흡사항은 ▲농장 전용 의복·신발 미착용 ▲전실 미설치 및 관리 미흡 ▲출입 차량·사람 및 농장 내부소독 미흡 ▲야생동물 차단망 미설치 또는 관리 부실 ▲울타리 파손 및 일부 구간 미설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고장 또는 30일간 미저장 ▲행정명령·공고 위반 등이다.

미흡사항이 확인된 가금농장에 대해선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 과태료 부과, 정비·보수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농식품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20개 반 40명,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43개 반 85명으로 구성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현장점검반을 꾸려 11월12일부터 내년 2월28일을 기한으로 운영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닭(산란계·종계·토종닭), 오리(육용오리·종오리), 메추리 농장 등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철저한 후속 조치와 함께 동일한 미흡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가금농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처 : 농민신문

농림축산
식품부

NEWS